

특별기고

도시재개발에 고향을 잃은 원주민



정기연 주필

타인이 주거 문제가 아파트화 하면서 삶의 보금자리인 고향이 없어졌으며 사람이 부화장에서 깬 병아리처럼 삭막하게 고향의 향수를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의 고향의 봄 동요는 도시 아파트에서 태어난 어린이는 생소한 이야기로 들린다.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행복 조건인데 아파트 문화가 도시를 잠식하면서 재개발이란 명목으로 정들었던 동네가 철거되고 원주민은 쫓겨나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원주민의 배려가 부족하여 원주민은 본래 집터에 지어진 아파트로 들어가 살 수 없으며 신축된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은행 빚쟁이 신세가 되고 만다.

빛 없이 살려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한다. 이웃끼리 정답게 살던 마을이 없어지고 쫓겨나 흩어진 원주민들은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와 대기업은 공장을 지어 재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지어 이익을 보는 재개발사업이다. 아파트값 책정에서 정주형 씨기 대선 공약에서 말했듯이 원주민이 고향에 들어와 살도록 배려해서 반값으로 공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원주민은 고향을 잃고 빚쟁이가 되면서 행복 조건에서 집 때문에 불행한 삶으로 젖어 들게 되었다. 따라서 도시 재개발 아파트 공사는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 정답을 알고 추진해야 한다. 어느 날, 우리 주변에 항상 있었던 건물들이 갑

자기 없어진 것을 보면, 가슴이 철렁한다. 친근한 공간 환경이 급격히 바뀌는 것은 삶에 불안감을 준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환경은 그 자체로 내 삶의 일부이며 향수가 젖은 곳이며 정든 주거환경은 곧 행복의 기본요건이 된다.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의 물결은 주거 문제를 야기했다. 주택 부족과 집값 폭등이 나라의 제일 큰 과제였던 때가 있었다. 1988년부터 정부는 200만 호 아파트 건설을 추진해 일산, 분당, 평촌 같은 '베드타운형' 신도시가 생겼다. 주택난과 함께 주거의 질 문제도 제기되었다.

도시재생사업은 시대 상황과도 부합한다. 사실 그동안 재개발사업은 건물이 가장 낡고 주거환경이 제일 열악한 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가장 돈이 되는 곳, 이른바 사업성이 큰 순서로 추진되었다. 대규모 재개발이 이뤄지자 정작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은 떠나야 했다. 소중한 추억은 지워졌고 동네는 해체되고 주민들은 갈등하고 분열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재개발이었는가?

낙후된 지역을 재생시켰더니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과 상권을 개척한 이들이 쫓겨나는 현상을 일컫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이러한 부작용을 상징한다. 도시의 속칭 달동네 마을은 산비탈에 개떡지갈이 붙은 달동네로서 주거의 질이 낮지만 떠날 수도 없는 저소득층 주민이 대부분이 살고 있다. 이들은 낡은 주택을 개축하고 좁고 어두

운 골목길을 넓고 밝게 만들었다. 작은 경로당, 공동작업장 등을 꾸며 주민들이 평생 이곳에서 살아야겠다는 충족감을 주었다.

이들은 좀 불편하지만, 현실에 만족하며 불평 없이 살고 있다. 이들에게 도시 재개발은 악재다. 저성장과 인구감소 시대의 도시재생 정책이 중시해야 할 것은 규모나 속도가 아니다. 예전의 대규모 재개발정책은 드넓은 땅을 확보해 큰 건물을 짓고 큰길을 내는 일이라 대자본만이 감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을 길을 고치고 살던 집을 리모델링하는 일은 동네 기업과 개인 기술자도 할 수 있다.

도시재생의 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래되고 낡았다고 해서 부수고 허무는 것이 아니라 고쳐 쓰는 것이다. 도시는 오래전에 태어나 앞으로 함께 살아갈 하나의 생명체라는 인문주의 정신이 밑바탕이다. 주민과 행정, 전문가를 도시재생사업의 세 주체로 들 수 있다. 이삼박자가 잘 맞아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이다. 행정의 속도 주의, 성과주의가 작동할수록 시민의 뜻과 엇가기 쉽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욕망과 개별적인 이해관계와 부딪칠 일이 많으므로 주민과 착실한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이 분수에 맞는 행복한 삶을 유도해야 하며, 재개발 아파트건축 사업으로 행복 조건인 의식주에서 주택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빚쟁이로 전락하는 원주민을 생각해야 한다.

社說

'일하는 21대 국회' 지역현안 해결 기대크다

21대 국회가 시작됐다. 국회 개원일은 5대 국회부터 들쭉날쭉하다가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 이후 실시된 1988년 13대 국회 때부터 5월 30일로 정해지면서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

새로운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고 나섰다. 지난 20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실망이 컸던 만큼 새 출발하는 국회에 더욱 기대를 갖게 된다. 177석의 '겨레'를 만들어내는 데 큰 힘을 보탤 지역민들도 여당의 달라진 위상에 걸맞는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광주 전남은 해묵은 숙제와 시급한 현안들이 쌓여있는 만큼 지역 국회의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대 선거에서 국민당을 선택하며 일방적 지지를 보냈던 반면 이번 선거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구 28개 선거구에서 전원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되면서 국회에서도 어느때보다 큰 힘을 발휘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광주의 경우 무엇보다 역사 바로 세우기에 필요한 법률 제정을 우선적으로 촉구했다. 과거에는 통상 미래 먹거리,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국회 확보를 요구해왔으나 이번에는 5·18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이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관련 법률은 20대 국회에서 모두 6건이 발의됐지만,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되며 지역민의 애타게 태웠다. 군 공항 이전 등 각종 지역 현안과 숙원사업의 해결도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5·18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이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돼 처리될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꼽았다. 관련 법률은 20대 국회에서 모두 6건이 발의됐지만,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또 광주와 전남의 현안사업인 광주 군 공항 이전 사

업의 5인 실타래도 국회에서 풀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지역구 10석 모두를 맡겨준 전남은 지역 현안을 미리 설명하며 적극적인 국회 지원 협조 요청에 나섰다. 다른 시도보다 성장동력이 열세인데다 여전히 사회간접자본(SOC) 여건이 열악한 만큼 새 국회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전남도와 도내 22개 지자체들도 올해 국회 지원이 필요한 현안 사업을 정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섰다. 이들 지자체가 마련한 6개 지역 공동사업과 22개 지자체가 1개씩 제시한 현안들이다. 공동사업으로는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 건설-남해안권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등이다. 또 농어민 공익수당 국가정책 도입 및 재정지원-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국고지원 확대-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등도 포함됐다.

특히 올해 3대 역점 시책 중 하나였던 방수방기속기유치사업에 실패한 전남도는 의고대학 도내 설립과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 유치에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끌어내 반드시 성공으로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의원들과 당정 협력한 간담회를 갖은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지역의원들이 무엇보다 힘을 합쳐 난제를 풀어나가는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 전반기에 일할 시간은 1년 남짓이다. 내년 4월에는 재보궐선거와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 정쟁에 돌입하면서 지역문제는 또 뒷전으로 밀리기 십상이다. 명실상부한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려는 국회를 응원한다.

독자기고

마스크 필수시대, 제대로 쓰고 제대로 버리자



김학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됐다.

지난달 27일부터는 국내·국제선 항공기 탑승객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렇듯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됐다.

KF94, KF80 보건용 마스크는 물론 덴탈마스크, 면마스크 등 사용하는 마스크 종류도 다양하다. 특히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점차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각급 학교의 등교개학이 본격 시작되면서 마스크 사용은 이전 보다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마스크 사용 후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쓰레기 때문에 생기는 환경오염문제

가 바로 그것이다.

정부 공급 마스크가 하루 천만 개 이상이나 하루에 버려지는 마스크는 또 얼마나 많겠는가? 개인위생을 위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는 것 못지않게 사용한 마스크를 제대로 버리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이이다.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나 유원지, 길거리 등에서 버려진 마스크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심지어 인근 주민들이 주로 찾는 가까운 산의 등산로에서도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마스크가 눈에 띈 정도다. 이겁니다. 마스크를 아무데나 버릴 경우, 환경오염 뿐 아니라 코로나 19 감염위험

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만약 버려진 마스크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붙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부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마스크는 재활용 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로 분류된다. 따라서 부직포나 면 등 재질이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마스크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물론 마스크를 버린 후 반드시 손을 소독하는 것은 기본이다.

바야흐로 마스크 필수시대, 지금부터라도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제대로 버리자. 개인위생을 넘어 환경보호도 함께 생각하는 '슬기로운 마스크생활'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62234 광주광역시 풍영로101번길 19-2

회장	김경	대표전화	(062)227-0000	FAX	(062)227-0084
발행·편집인	전광선	광고	(062)227-0000	구독료	월 10,000원
사장	이문수	등록번호	광주.가25(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편집국장	박종수	주필	정기연	서울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선문로 18(서초동) 영진빌딩 6층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일한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마음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혁신·소통·청렴
시민중심 디자인으로
완성된 광주!

시민이 주인이며, 시민이 중심인 도시!
민선7기 광주광역시가 함께 하겠습니다.

민선7기 광주광역시는 혁신·소통·청렴으로 모든 시민들을 포용하는 열린 시정이 될 것입니다.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풍요가 함께하는 광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